

반대하던 한국당 찬성 기류...공수처 '탄력'

당·정·청 입법화 의지 재확인...설치논의 급물살

한국당 의원들 대거 수사선상 오르자 태도 바뀌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오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찬성으로 변화하는 기류를 나타내고 있어 공수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공수처 설치에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극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정하며 그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이고 신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이 내세운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대한 기류 변화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홍 대표는 최근 검찰을 '정권의 총권'이라고까지 맹비난하면서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수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는 크게 차이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개혁 쌍두마차 웃음 인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가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무수석 정장선·한병도 거론

강기정 고사...靑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21일 정무수석 인선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립감 있는 전직 의원을 발탁하거나, 정부 업무 견속성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3선의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한병도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여론 내 신망이 두텁고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협치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정무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가운데 선임이라는 점에서 정 전 의원은 공공기관장으로 낙점됐다는 관측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중도 온건 성향의 김성곤 전 의원은 다크호스다. 다만, 정무수석으로서 강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청와대 참모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후보로는 정무수석실의 한병도 정부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비서관은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반면 친 비서관은 친문 중에서도 강성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꾸준히 한마병에 오르는 3선 출신 강기정, 오영식, 최재성 전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20일 청와대 핵심인사를 만나 강력한 고사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정당발주석 가운데 선임이라는 점에서 정 전 의원은 공공기관장으로 낙점됐다는 관측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정의장 "의원 5명 특활비 연루 의혹 불쾌"

국정원에 항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국정원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동 후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보위원들 5명이 (돈 받은 사람 명단으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국회 의장으로서 항의했다는 얘기를 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장 측은 "정 의장이 국정원에 직접 항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욕을 듣게 됐으니, 소문이 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국정원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웃으며 만난 여야 쟁점현안엔 '으르렁'

원내대표 회동...사회적 참사법·예산 심사 놓고 충돌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주요 충돌 지점은 이른바 제2의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담은 사회적 참사특별법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나 한국당은 그간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회동에서도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으나,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소위가 난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서비스 공무원의 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

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로 논의하고 상정한 뒤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지 한다면 우리로서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 예산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12월2일)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khh@

법사위,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23일 현안질의

청문회는 유보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열자고 강하게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물러버렸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현안질의를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야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우선 법무장관만 부르기로 했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자사로 36